

# “8개 신규 고속도로 정부계획 반영해달라”

## 최 지사 국토부 방문 요청

내년 말 개통될 동서·동해·제2영동 고속도로의 후속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요구되고 있다. 여전히 열악한 도내 고속도로망 확충과 함께 대형 SOC사업 종료 후 우려되는 지역 건설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다.

최문순 지사는 17일 세종시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동서·동해·제2영동고속도로의 내년 말 개통을 위한 전역사업비 전액 반영과 함께 8개 신규 고속도로사업의 정부계획 포함을 건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016~2020년 고속도로 건설계획’ 수립 용역에 착

구간명	노선번호	연장(km)	차로 수	사업비(억원)
춘천 동내~철원 김화	55	63.0	4차로	23,688
원주~세종	원주세종	90.0	4차로	33,840
제천~삼척	담부고속	123.2	4차로	46,323
공근~새말	연결지선	12.0	4차로	4,512
포천~철원	남북4축	25.3	4차로	9,512
속초~간성	65	15.7	4차로	5,903
포항~삼척	65	180.4	4차로	67,830
양구~영천	남북6축	309.5	4차로	51,000
8개 사업		756.1		218,920

수했다. 최 지사는 “현재 건설 중인 3개 고속도로 사업 모두 2016년 완공 예정인데 도내 고속도로 후속사업 계획은 전무하다”며 “정부의 계획에 도내 8개 건의노선 모두 우선순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도가 건의한 8개 노선은 춘천 동내-철원 김화, 원주-세종, 제천-삼척, 공근-새말, 포천-철원, 속초-간성, 포항-삼척, 양구-영천 등이다. 최문순 지사는

이날 이르면 올 상반기 중에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올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여주-원주 철도 등에 대한 국토부의 지원도 당부했다.

춘천-속초 고속화철도는 비용·편의(B/C)이 0.97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주-원주 철도 역시 경기도 월곶-판교 구간과 연계 시 B/C가 0.99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업타당성의 B/C 기준인 1에 육박하고 있다. 최 지사는 또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강원랜드 정규직 증원을 건의했다. 강원랜드는 2015년 증원 규모를 339명으로 예상했지만 45명 증원만 승인돼 나머지 294명은 무더기 해고 위기에 처했다. 이규호기자

## 강원지방조달청장에 한운자씨



신임 강원지방조달청장에 황성 출신 한운자(55·사진) 서기관이 임명됐다.

한 청장은 한국방송통신대 불어불문학과와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을 졸업하고 1978년 강원지방조달청에 신규 임용돼 광주지방조달청 관리과장·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장·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응용과장 등을 거쳤다. 한 청장은 오는 23일 부임할 예정이다. 하위윤기자 faw4939@

## 신청사 사업비 900억원 산정 당초보다 100억원 줄어

【춘천】춘천시는 신청사 건립비용이 당초 추산보다 적은 900억여원으로 산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체 분석 결과 순수 공사비 800억원을 비롯해 설계용역과 도시계획, 건축설계 감리비 등 부대비용은 110억원으로 추산됐다. 당초 건립비용은 1,000억원이었다.

현행 공유재산관리법은 춘천과 같이 인구 20만~30만명의 경우 최대 청사 면적을 2만1,110㎡로 규정하고 있어 시는 본청 건물

1만7,759㎡, 의회 건물 3,351㎡ 규모를 고려하고 있다.

또 관급 공사 단가를 적용한 2개 건물의 공사비는 600억원이다. 모두 지하에 조성되는 주차장은 1,000면 규모다. 주차장 조성비용-170억원과 30억원의 현 청사 철거비용 등을 감안하면 순수 공사비는 800억원 규모다.

시는 현재 청사건립기금으로 600억여원을 적립하고 있는 만큼 부족한 300억원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100억원을 저리

로 융자받고 나머지 200억원은 준공 전까지 연차적으로 분담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청사 신축에 대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제출된 의견을 정리, 실시설계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진행될 설계 공모는 전국 단위로 컨소시엄 방식을 통해 지역 업체가 일정 비율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청사는 내년 상반기 착공, 2018년 상반기 준공될 예정이다. 류재일기자 cool@kwnews.co.kr

### • 새익자 •

#### 한 운 자 강원조달청장

조달청은 17일 강원조달청장에 한운자(57) 서울조달청 정보기술 운영과장을 발령했다. 황성출신인 한 청장은 한국방송통신대 불어불문학과,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1978년 강원조달청에서 공직을 시



작해 조달청 기획관리관실, 서울조달청 경영관리과, 조달청 구매사업과, 광주조달청 관리과, 인천조달청 자재구매과장, 서울조달청 정보기술운영과장 등을 역임했다. 박현철

## ‘평창올림픽 조직 확대’ 내달 시·군공무원 인사

도 동계올림픽본부와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조직확대에 따른 도 및 시·군 공무원 인사가 다음 달부터 본격화된다. 도는 동계올림픽본부 확대 개편 등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을 최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동계올림픽본부 22명 등 37명의 일반직 공무원 증원, 76명의 소방공무원 증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조례안이 오는 20일 도의회를 통과하면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순께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동계조직위 확대개편에 따른 인사도 이어진다. 율하와 내년 2년간 동계조직위에 파견될 도 및 시·군 공무원은 90명 내외다. 이규호기자 hokuy1@

## 춘천시 “신청사 건립비 최대 910억”

### 시, 청사면적 2만1110㎡ 규모 산출 시민 아이디어 공모 실시설계 반영

춘천시 신청사 건립 비용이 900억원대로 산정됐다. 시는 신청사 신축 비용을 인구 20만~30만명에 해당하는 관련법 청사 건립 기준에 맞춰 청사 면적 2만1110㎡(본청 건물 1만7759㎡·시의회 건물 3351㎡) 규모로 산

출한 결과 최대 910억원으로 나왔다. 이는 당초 예상됐던 1000억원 안팎보다 100억원 가량 감소한 금액이다. 건립 비용은 공사비와 부대 비용으로 크게 나뉜다.

공사비는 본청과 시의회 건물 공사비 600억원, 10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지하 주차장 조성비 170억원, 현 청사 철거 비용 30억원 등 총 800억원이다. 도시계획, 타당성조사, 건축설계 용역비, 감리비 등의 부대비용은 110억원이다. 시는 시민 아이디어 설계 공모를 통해 제출된 의견을 검토, 실시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신청사는 내년 상반기 착공돼 오는 2018년 상반기 완공된다. 시 관계자는 “당초 1000억원으로 예상했으나 실무 검토 결과 관련 법이 규정한 최대 면적으로 건너뛰어도 순수 사업비가 910억원 정도로 나왔다”며 “청사건립기금으로 600억원이 적립돼 있어 재정에 미치는 실제 예산 부담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춘천/김정호 kimpro@kado.net

# 최저가낙찰제 심사도 표준시장단가로 개편

조달청, 저가심사 기준 개정  
‘1000분의 3’ 미만 투찰시  
부적정 판정 조항은 유지

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에 속도가 붙은 가운데 300억원 이상 정부 및 지자체 발주 최저가낙찰제 공사에 대한 저가심사도 표준시장단가 체계로 개편된다.

아직 시장조사 및 단가산출 등이 완료되지 않아 표준시장단가보다는 실적단가 활용비중이 높은 만큼, 표준단가 체계에서도 실적공사비와 마찬가지로 1000분의3 미만으로 투찰하면 해당 공종은 부적정 판정을 받는다.

조달청은 17일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표준시장단가 도입에 따라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조달청은 오늘(18일) 이후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발표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새로 입찰공고하는 물량은 물론, 앞서 공고가 이뤄진 공사라도 기초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정(변경)공고를 통해 해당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실제 조달청은 최근 추정가격 647억원 규모의 초지대교~인천간 도로건설공사에 대한 변경공고를 내고 해당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 기준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각 조항의 ‘실적공사비’란 용어를 ‘표준시장단가’로 정리했다. 입찰공고에서는 물론 심사 과정에서도 실적공사비란 용어는 사라진다는 뜻이다.

그러면서도 현실단가와 괴리가 컸던 실적단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실공사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저가투찰 금지조항은 종전대로 유지된다.

부적정공종 판정을 위한 가격 평가에서, 조달청 조사내역서에 적용된 표준시장단가보다 1000분의3 이상 낮지 않은 경우 90점, 그 외의 경우 0점으로 평가하는 기준은 현행대로 운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총 2000개에 달하는 개별 실적단가 중 현재까지는 단 77개만 표준단가로 변경된 가운데, 앞으로 당분간은 조사가 완료된 단가부터 단계적으로 변경이 이뤄질 예정인 만큼 저가투찰로 인한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조치로 해석된다.

물론, 향후 모든 실적단가에 대한 시장조사 및 표준시장단가 산출이 마무리돼 현실단가에 근접하게 된다면, 해당 조항은 다시 삭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달청 역시 이번 기준은 관련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16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갖는다고 유효기간을 설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실적공사비가 전면 배제되고 표준품셈이 적용되는 300억원 미만 공사에 비해서는 당장의 공사금액 상승효과가 덜하겠지만 표준단가가 확대될수록 공사비 현실화는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특히 저가투찰 금지조항은 종합심사낙찰제가 도입되더라도, 건전한 수주경쟁과 더불어 시설물 안전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표준단가가 실제 현장단가에 부합할 때까지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봉승권기자 skbond@